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4차 유관기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알림

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유관기관협의체 운영규정 및 환경부 토양 지하수과-951호('08.11.06)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근거에 따라 제4차 정기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09.1.22일(목)까지 귀 기관의 협의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09.1.30(금) 11:00, 화성시청 회의실 및 매향리 사격장

나. 참석자 : 중앙부처(환경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지자체(강원도, 경기도, 화성시), 시민단체(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및 정화사업 전문기관 관계자

다. 안건 : '09년 협의체 운영방안 등

- 붙임 1. 제3차 유관기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결과 1부.
2. 제4차 유관기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계획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국방부장관(대외협력팀장), 국방부장관(환경보전과장), 국토해양부장관(해양생태과장), 경기도지사(특별대책지역과장), 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 녹색연합(녹색사회국장),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환경사무관 맹학균 서기관 강석우 토양지하수과 전결 01/16
과장 정종선

협조자 환경사무관 전권호

시행 토양지하수과-136

접수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http://www.me.go.kr>

전화 02-2110-7692 전승 507-6282 / maenghk@me.go.kr / 비공개(5)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유관기관 협의체』 제 3 차 정 기 회 의 개 최 결 과

□ 회의 개요

- 목적 :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관련 안건 토의
- 일시 : '08. 11. 21(금), 10:00 ~ 12:00
- 장소 : 정부과천청사 2동 소회의실 (111호)
- 안건 : 1. 반환기지 정화사업 실시설계중 추가조사 결과
2. 매향리 사격장 사격잔재물 제거 및 오염정화
3. 동일 관할지역내 토양오염 반출·집약처리
4.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기준
5.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 참석자 :

기 관	참 석 자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정종선 과장, 전권호·맹학균 사무관
국방부	유동준 서기관(환경보전과) 오창건 중령, 김정식 사무관(기지이전사업단)
강원도(환경정책과)	김용우·김동원 주무관
경기도	정영균 주무관(특별대책지역과) 김보경 주무관(의정부시)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황민혁 활동가
한국농촌공사	서상기 차장
환경관리공단	한하규 팀장

□ 주요 토의결과 (붙임 참조)

○ 안전1 : 반환기지 정화사업 실시설계중 추가조사 결과

- 국방부(환경관리공단)는 실시설계중 추가조사 결과 오염물량 20~30% 증가했으며, 90% 정도가 유류오염이라고 설명
- 정화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후 확정 예정

○ 안전2 : 매향리 사격장 사격잔재물 제거 및 오염정화

- 국방부는 '07.7월에 눈에 보이는 지표부 불발탄 357개를 확인·처리하였으며 갯벌속 불발탄 탐지-제거 기술을 검토중임을 설명하고, 조사·제거의 범위·심도를 어디까지 할지와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 탐지가능 범위 등에 대한 약간의 이견 있었으나, 가능한 기술을 동원하여 탐지하고, 탐지후 비용·기간등에 대해 지자체·주민 등과 협의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동 안전을 협의체의 중요 이슈로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차기 회의시 매향리에 대한 국방부 추진방향을 발표해 줄 것과, 매향리 현장방문 추진할 것, 화성시와 국토해양부도 참여할 것 등에 합의

○ 안전3 : 동일 관할지역내 토양오염 반출·집약처리

- 환경부가 법령을 정비하고, 설계 반영 등을 위해 공문조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

○ 안전4 :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기준

- 국방부는 정화기준은 “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으나, 관련법에 “가” 기준으로 정화할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고, 요구자가 정화비용 부담하거나 향후 토지이용을 고려 지목을 변경해 줄 것 요청
- 지자체는 지목변경은 불가하고 정화비용을 매각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에 따라 차후 감정평가사 포함하여 논의할 것 합의

○ 안전5 :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 국방부 환정보전과가 협의체에서 빠질 것과 이에 따른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이견이 있었음.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포함 통보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의체 제4차 정기회의 개최('09.1월중)

<붙임>

안전토의 세부내용

< 안전 1 : 반환기지 정화사업 실시설계중 추가조사 결과 >

- 반환기지 추가조사 결과 발표 (환경관리공단)
 - 오염물량 20~30% 증가, 90% 정도가 유류오염토양 등
- 추가조사시 TPH, 페놀 등 특정 물질만 조사한 이유는?(녹색연합)
 - 기존 조사는 전수조사를 했으나, 실시설계시 조사는 기존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조사 했음(환경관리공단)
- 새로 발견된 오염 있나? (녹색연합)
 - 기존 오염이 확산된 부분이나, 기존에 조사 못 했던 부분으로 인해 오염물량은 약 30% 가량 증가하였음(농촌공사)
- 비용은 얼마나 증가했나?(녹색연합)
 - 실시설계 중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함(농촌공사)

< 안전 2 : 매향리 사격장 사격잔재물 제거 및 오염정화 >

- 매향리 해상 불발탄 제거 안되고 있음.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매향리는 주한미군 이슈의 진원지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며, 람사르 습지인 서해안 습지의 일부임(녹색연합)
 - 추진현황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을 요청드리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논의를 부탁드림(환경부)
 - 작년 7월에 눈에 보이는 지표부 357개 불발탄(사격잔재물)을 확인하였음. 갯벌 속에 불발탄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 했음. 갯벌지역에서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깊이는 60Cm 넘지 않음. 세계적으로 불발탄

탐지·제거하는 팀 접촉하였음. EOD 팀에서도 위험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탐지·제거 2단계 기술 검토중이며 조사 준비중임. 조사·제거 범위·심도를 어디까지 할지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필요함. 주민들은 갯벌 굴착에 반대함. 주민들은 과거 사격 진행중에도 갯벌에서 수산물 채취하였으며, 현재에도 안전문제로 출입자제를 요청하나 주민들 계속 출입중임. (국방부)

○ 육지와 갯벌을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 있음. 육지는 정화사업 반영중이지 않은가? (환경부)

- 그렇음(국방부)

- 갯벌 불발탄 제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환경부)

- 어려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팀 2개 접촉중임.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없었음 (국방부)

○ 미군에 조사결과 못 받았나? (녹색연합)

- 미군도 없었음 (국방부)

- 양측 EOD팀이 확인했음

○ 과거 녹색연합 조사결과 사격장 실무장탄 제거 안 했음(녹색연합)

- 과거 조사시 모두 확인했으나, 깊이 박힌 불발탄 가능성은 있다는 언급 있었음. 매향리 실제 오염원은 버려진 탄임(환경부)

- 과거에 사용한 불발탄 잔재 가능함. 탐지 60cm 이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녹색연합)

- 탐지방식이 4가지 정도 있음. 심도는 초음파법이 깊으나 정밀도가 낮음 (국방부)

- Impact area를 중심으로 3단계로 조사하는 방식 있음 (환경부)
- 가능한 기술을 동원하여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 필요. 주민들 의견과 환경적 진단을 종합하여 결정할 필요. 다른 사업보다 빨리 추진할 필요 있음 (녹색연합)
-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있으나, 가용한 기술 등의 문제임. 앞으로 협의체 중요 이슈로 채택하고 계속 모니터링 필요함. 가능한 모든 기술 동원하여 해결할 필요 (환경부)
- 가용한 기술 동원하여 탐지하고, 탐지후 비용기간 등 모든 문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경기도·화성시 등 지자체와 협의 필요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스펙트럼도 고려할 필요. 합의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 필요 (국방부)
- 유류오염 정화 이외에도 매향리 정화 관련 용역 등 서둘러 추진할 필요 (녹색연합)
- 용역 등 예산반영 필요함 (공단)
- 용역 없이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중임 (국방부)
- 매향리에 대한 국방부 추진방향 제시 요청함 (환경부)
- 복귀후 내부논의 해 보겠음 (국방부)
-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국방부가 그냥 넘어가려 한다는 오해 있음 (녹색연합)
- 그렇지 않음. 매향리 안전문제에 대해 확실히 책임질 것임 (국방부)
- 12월중 현장방문 제안함 (녹색연합)

- 12월중 매향리 대책을 다시 논의하고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음. 매향리 논의에는 화성시와 국토해양부의 참여도 필요함 (환경부)

< 안건 3 : 동일 관할지역내 토양오염 반출·집약 처리 >

- 법을 손질하겠음. 환경부 정책방향과 일치시킬 필요 있음. 설계 반영을 위해서는 공문조치 등 지원하겠음 (환경부)

- 동의함 (경기도·국방부)

< 안건 4 :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기준 >

- 국방부가 “나” 기준으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부)

- 토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오염신고를 하였으며, 강원도/서울시는 조치 명령, 경기도는 의견통보의 형식으로 답변하였음 (국방부)

- 과거에는 “가” 기준으로 답변하지 않았나? (환경부)

- 지자체 정화명령에 따라 하겠다는 답변이었음 (국방부)

- 실제 행위는 “가”로 취하지 않았나? 토양법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렸다가 뒤집은 것임 (환경부)

- 관련법에 따라 한다는 방침이었음. 당시 정책부서에서 정치적·사회적 문제 고려하여 “가” 기준 검토하였음. 집행부서와 상하관계였으나, 현재는 반환미군기지 정화업무가 단일부서로 통합되었음. 일단 “가” 기준 설계후 지자체 정화명령에 따라 판단할 계획임.

- 해결 방안은? (환경부)

- 정화기준은 “가” 기준이 옳으나 국가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할지의 문제임. 최초부터 법에 따라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데 공감함. 금년도 7.1일부터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으로 이관되었음. 검토결과, “가” 기준으로 실시설계할 근거 없음. 해법으로는 첫째, 요구자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둘째, 향후 토지이용 고려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임.

- “가”, “나” 기준 적용시 비용차이는? (환경부)
- 약 600억 정도임 (국방부)
- 지목변경은 불가능 사항임 (의정부)
- 결국 비용분담의 문제임 (환경부)
- 특별법 취지가 지자체 지원임. 지자체는 환경치유비용 여력 없음. 캠프 에드워즈의 경우 이대와 “가” 기준으로 합의 했음. 법적 근거 없다고 하나, 종합적 고려시 근거 있음. 특별법에서 제거를 명시했음 (경기도)
- “가” 기준이 이상적임. 청와대 사회수석실 조정에 대한 입장은? (환경부)
-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했음. 감정평가법 검토결과 정화비용을 매각비용에 반영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것임. (국방부)
- 정화비용을 매각비용에 반영하는 것 가능함 (의정부시)
- 차후에 청와대 안에 대해 각자 분석후 감정평가사 포함하여 논의를 할 것 제안. 징발법 등 추가적 법률 검토 필요. (환경부)
- 국방부 입장은 작년 협의체 논의사항과 청문회 답변 등을 뒤집는 것임 (녹색연합)

< 안건 5 :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

- 국방부 공문에 따라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논의필요함. 환경부서와

사업부서 모두 참여할 필요 있음. (환경부)

- 과거 정책업무(환경보전과)와 집행업무(국방시설본부) 기능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 통합한 것임. 환경보전과는 반환기지 정화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 (국방부)
- 환경문제에 환경보전과 빠진다는 것 이해 안됨. 협의체에 사업단 포함 통보 바람 (환경부)
- 협의체 구성시 쉽지 않을 것 예상했음. 조금씩 양보하고 논의하기를 희망함. 협의체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며, 인간적·화학적 결합이 필요함. 상대방 입장에 대한 고려 필요함 (의장)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유관기관 협의체』
제 4 차 정 기 회 의 개 최 계 획

□ 목 적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관련 안건 토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09. 1. 30(금), 11:00 ~
※ 회의후 오후에 매향리 사격장 현장방문
- 장소 : 화성시청 회의실 및 매향리 사격장

□ 참석대상

- 중앙정부(환경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지자체(경기도, 강원도, 화성시),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및 정화사업 전문기관 관계자

□ 주요 협의안건

- '08년 협의체 운영성과 정리 및 '09년 협의체 운영방안 협의
 - 환경부 : '08년 협의체 운영경과 발표
- 매향리 사격장 갯벌 및 해양 환경조사 및 정화방안 협의
 - 환경부 :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발표
 - 국방부 : '07년 반환후 조치내역 및 추진경과 발표
 - 화성시 : 주민여론 및 지자체 입장 발표
- 기타 참여기관별 제안 안건 토의